민주 임대차 3법 보강 예고…인수위와 힘겨루기 불가피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
시세 반영 비교가격제 도입 검토
인수위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세금 전면 손질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를 논의는 하겠지만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막고 이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급, 금융, 조세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카테고리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새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31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 중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은 부동산 세부담 완화다.

취득·양도·보유 전(全) 과정의 세금을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인데, 시급성과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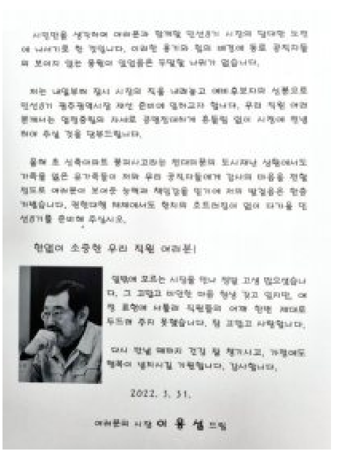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삼정검 수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에게 삼정검을 전달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일 밖에 모르는 시장 만나 고생"…이용섭 시장 직원들에 감사편지

재선 도전 위해 시장직 내려놔
예비후보 등록…권한대행 체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위해 잠시 광주시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사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모두의 건강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30일 전 직원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이라는 글로 시작하는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일 밖에 모르는 시장을 만나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그 고맙고 미안한 마음 항상 갖고 있지만, 애정 표현에 서툴러 직원들의 어깨 한번 제대로 두드려 주지 못했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내비치지 못했던 절절한 속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이 시장은 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3년여간 시민들의 염려와 불편은 날로 늘어가고 이러한 시민들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우리 직원들의 몫이었다"고 공직자들의 헌신에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 밖에도수많은 업무와 크고 작은 성과에서보여준 직원 여러분들의 공헌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면서 직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위대한 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담대한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자신의 재선 도전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명정대하게 시정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시장은 "오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더 크고 더 강한, 사람의 나라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갖는 의미는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제대로 해보라고 만들어 준 것인데, (정권) 연장을 못하고 정권을 내준 것은 역사의 과오"라면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 오는 데 광주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직무정지가 됨에 따라 문영훈 행정부시장이 이날부터 시장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청와대 "무분별한 옷값 의혹 제기 유감"

"특활비 아무 문제 없어"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할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의 공개 입장표명은 최근 김 여사의 옷값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고 성과도 있지만, 최근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에 공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김 여사의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박 수석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과 관련, 현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원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 정부를 겨냥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감사원에 이번 사안의 조사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충돌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을 두고 촉발됐던 양측의 인사권 대립이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